

“환경규제 완화조치는 공공의 적”



김병오 | 본지 편집국장

최 근 환경재앙이라고 일컬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 동남부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타리나와 리타 등이 일부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 최강대국이란 미국도 이러한 자연재해 앞에는 맥을 못추는 상황을 우리는 옆에서 보고 있다. 이번 사태는 자연과 환경을 소홀히 다룬 대가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환경의식을 갖고 현실을 타파하고 있는가. 최근 정부 산업부처에선 경제를 살리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환경규제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요 핵심내용은 현재 1·2종 사업장에 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채용토록 돼 있는 제도를 3년 이상 환경관련업에 종사한 자로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많은 폐단과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먼저 대학의 환경관련학과가 재조정되어야 하며, 자격증 제도 자체도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는 젊은층 고용창출에 대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며, 국가환경정책 백년대계를 뒤흔드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1·2종 업체라면 대기업 수준인데 환경기술인력 한 두명 줄이는 것이 경영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오히려 경영개선과 철저한 오염저감기술개발로 과태료 및 행정조치를 면하는 것이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더욱 한심한 발상인 것이 전문 기술인력의 활용도를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병원에 근무를 하든 입원을 하든 3년만 지나면 의사면허를 주고, 운전 조수석에 3년만 앉아 있어도 면허를 내주자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아닌가.

규제를 완화해야 할때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 기업을 하는 사람이던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정부든 부담이 되는 족쇄는 풀어야 활발히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환경은 국민의 생명과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부라는 부처도 점차 확대 개편돼 왔으며, 그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이 시점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자리 창출은 커녕 일자리 박탈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부르짖어 왔던 상생의 정책은 실종하고 마는가. 정책입안자들은 다시한번 후대를 위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격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